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68
----------	------

발의연월일 : 2024. 11. 26.

발 의 자 : 조지연 · 김형동 · 신성범
박덕흠 · 백종헌 · 이인선
최수진 · 고동진 · 우재준
임이자 · 강대식 · 김장겸
엄태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 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 등으로 보전·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23.12)하여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호지역과 달리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정의, 잠재적 목록 구축, 등록방법 및 절차, 등록 이후 관리·점검 및 지원 등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

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하여 보전·관리 함으로써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7조 신설 등).

또한, 자연공존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법적 논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 증진 및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호지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중에서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의 보전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을 말한다.
12. “자연공존지역”이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향상에 장기간 기여하는 지역으로서 제10조의3에 따라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제7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른 자연공존지역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이하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1. 보호지역이 아니며 지리적으로 구별된 지역일 것

2. 관계 법령, 정책, 관리 계획 등 관리·관할체계가 갖추어진 지역일 것

3.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의 장기적·지속적인 보전·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일 것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자연공존지역의 등록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협의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공존지역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연공존지역의 시책 등에 따른 관리 현황 및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 등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등록·해제 방법 및 절차,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자연공존지역 보전·관리 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 관리인 등에게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2.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 관리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임을 확인하는 증서(이하 “자연공존지역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이 자연공존지역의 등록·보전·관리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적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자연공존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존지역의 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존지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보호지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중에서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의 보전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을 말한다.</u>
<u><신설></u>	<u>12. “자연공존지역”이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향상에 장기간 기여하는 지역으로서 제10조의3에 따라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u>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생략)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u>8.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u>

8.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설>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자연공존지역 대상 목

록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제 10조의3에 따른 자연공존지역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이하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1. 보호지역이 아니며 지리적으로 구별된 지역일 것

2. 관계 법령, 정책, 관리 계획 등 관리·관할체계가 갖추어진 지역일 것

3.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의 장기적·지속적인 보전·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일 것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신 설>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자연공존지역의 등록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 2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협의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자

<신 설>

연공존지역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연공존지역의 시책 등에 따른 관리 현황 및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 등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등록·해제 방법 및 절차,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자연공존지역 보전·관리 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

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 관리인 등에게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2.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 관리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임을 확인하는 증서(이하 “자연공존지역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이

<신 설>

자연공존지역의 등록·보전·관리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적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자연공존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존지역의 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존지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